

# 민주평화당, 5·18 왜곡 3인 제명 약속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제58차 최고위원회의(제2차 국민경청최고위원회 및 제2차 5.18 역사왜곡대책특위 연석회의)에서 5.18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병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5·18 단체 관계자들을 초청, 이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최근 5·18 왜곡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제명을 위해 법률적 대안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했다.

평화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경청최고위원회의 '나이크를 빌려드립니다'를 열고 이러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정춘식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과 김후식 5·18 민주화운동부상지회장, 양희승 5·18 구속부상지회장, 정현애 오월여매니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의 왜곡 발언에 반박하면서 이들의 제명을 촉구했다. 만약 제명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 해체운동까지 이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 5·18에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의 구속수사와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을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평화당 의원들은 이들과 함께 한국당 3명 의원의 제명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장병완 원내대표는 "거짓선동으로 5·18 민

주화운동의 송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5·18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민주화운동"이라며 "입법부인 국회는 1995년 특별법을 제정했고 정부는 1997년 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서 그 성격을 분명히 했다. 사법부 또한 1997년 대법원이 민주화운동에 대해 신군부에 항의하는 주권자, 국민이 헌법 수호를 위해 결집을 이룬 운동이라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원내대표는 "입법·행정·사법부 모두가 5·18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헌법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며 "북한 개입설은 국가 차원에서 여섯 차례 조사해 사실 무근이 밝혀진 사안이고 과거사위원회가 1년 6개월의 조사 끝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공식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미완의 역사라며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했는데 명령자가 누구인지 아직 명확히

## 5·18 단체 관계자들 초청...견해 청취 제명추구 서명운동·리본달기 운동 추진 의원회관서 사진전·긴급토론회도 개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20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진상조사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게 아니라 불행한 과거의 진실을 밝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함이다"며 "어울하게 희생당한 영령들이 누구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진실이 밝혀져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업 최고위원은 한국당 의원 3명의 발언을 망언,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역사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징계를 추진한다는 한국당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유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셀프 징계를 추진한다고 한다.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면 감사하고 옹호하더니 여론의 지탄이 이어지자 이제와 (징계) 시늉만 하고 있다"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유 최고위원은 "징계수위를 보면 차원에서 여섯 차례 조사해 사실 무근이 밝혀진 사안이고 과거사위원회가 1년 6개월의 조사 끝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공식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누구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미완의 역사라며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했는데 명령자가 누구인지 아직 명확히

발언과 더불어 온라인상에 떠도는 '가짜뉴스'들에 대해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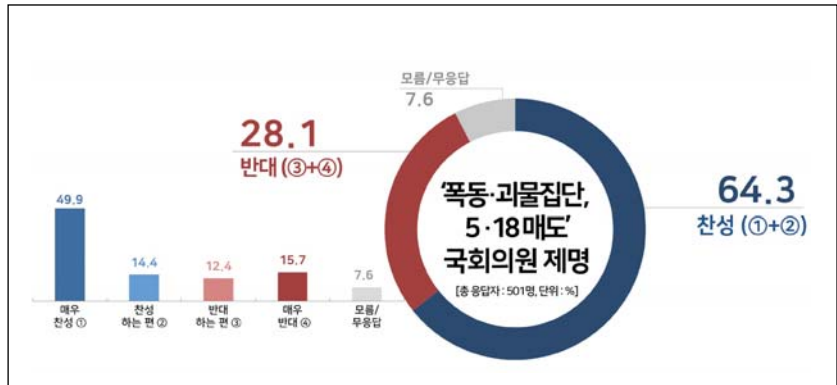
유 정책위의장은 "유튜브 등에서는 5·18 유공자물만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봤다. 수구세력들이 5·18을 모욕하는 행위이고 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위"라며 "그런 것들이 팩트가 아니라라는 것을 밝히고 얘기해줘야 한다. 망언 행위를 한 의원들을 즉각 제명하기 위한 국민서명운동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법률적 대안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은 5·18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서명운동 ▲제명추구 리본달기 운동 ▲사진전 개최 ▲긴급토론회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14일부터 한국당 의원 3명의 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서울·대전·광주·목포·여수·전주·익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별로 시작할 것"이라며 "전 당원을 대상으로 제명 촉구 리본달기 운동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평화당과 5월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사진전을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14일 오후 2시 5·18 광주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의의라는 제목의 긴급토론회도 연다"고 부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국민 64% "5·18 왜곡 발언 의원들 제명"

최근 여야 4당이 5·18 왜곡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이들의 제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지난 12일 오피니우스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표본오차 3.5%·신뢰수준 ±4.4%p·응답률 78.1%)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18 왜곡 발언을 한 의원들의 제명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64.3%로 나타났다. 반대는 28.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69.6%, 26.8%)과 경기·인천(64.1%, 28.3%), 부산·울산·경남(57.2%, 29.5%), 대구·경북(57.6%, 32.8%), 대전·세종·충청(54.6%, 30.7%) 등도 찬성 입장이 절반을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79.1%, 17.7%)와 30대(74.6%, 21.7%), 20대(68.1%, 23.9%), 50대(56.7%, 31.3%)에서 찬성 입장이 반대 입장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찬성 49.9%, 반대가 40.4%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당층은 찬성 52.0%, 반대 22.9%, 중도층은 찬성 63.8% 반대 27.2%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은 정반대 결과를 보였다.

한국당 지지층은 찬성이 19.6%, 반대가 70.7%였고 이종명 '배우 반대'는 38.8%였다.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찬성 28.0%, 반대 56.5%, 보수층은 찬성 34.1%, 반대 56.0%로 파악됐다.

뉴스스

## 민주·정의 지지층, 광주·전라 찬성 80% 넘어 한국당 지지층은 반대가 70.7%...찬성 19.6%

6.2%)에게 왜곡 발언 의원들의 제명 찬반 여부에 관한 국민 여론을 조사했다.

이 결과 전체의 64.3%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의원들의 제명에 찬성했다. 특히 49.9%, 절반 받은 강한 찬성의 뜻을 보였다.

무당층은 찬성 52.0%, 반대 22.9%, 중도층은 찬성 63.8% 반대 27.2%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은 정반대 결과를 보였다.

한국당 지지층은 찬성이 19.6%, 반대가 70.7%였고 이종명 '배우 반대'는 38.8%였다.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찬성 28.0%, 반대 56.5%, 보수층은 찬성 34.1%, 반대 56.0%로 파악됐다.

뉴스스

## 김진태, 靑 1인시위... "文·영부인 특검"

자유한국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확정 한 김진태 의원은 13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지난 대선은 무효"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경수 판결문에 의하면 문재인이 92회, 대선이란 말이 97회 나온다. 사실상 공범이라는 게 판결문에 드러난다"며 "김경수 시연 날짜가 2016년 11월9일로 나온다. 이거 대선과 탄핵 전에 여론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나온다. 재벌 개혁 보고서를 드루킹에게 작성시켰다"며 "그 보고서가 김경수를 통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되고, 문 후보가 기초연설 하면서 공약으로 채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날 우리가 어렸나,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최순실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시켰고 그 난리가 나지 않았느냐"며 "문재인 후보는 드루킹 범죄자에게 맡겨서 작성하게 하고 채택하

지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적폐수사, 이 아이디어도 드루킹으로부터 받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몰래 알아냈다. 특검이란 건 독립해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건데 하위법 특검이 서둘러 짐을 썼다"며 "사실상의 입력을 행사해서 특검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법)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살아 있다. 문재인·김정숙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라며 "조민간 특검법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與, 한국당에 "당내 징계 아닌 국회의원 제명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을 쏟아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필요한 것은 면피용 당내 징계가 아니라 국회의원 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떤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든 당 차원의 자체 징계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의 국민 기만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며 자당 의원들의 잘못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여적주장을 반복하며 또다시 역사와 국민을 욕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길 5

광산구